

나주혁신도시 '짜퉁 명품도시' 전략 우려

공원·문화시설 없는데 누가 오겠나

이전기관들 “땅값 비싸다” 부지매입 지연 공공시설·녹지 줄여 ‘그린 도시’ 조성 차질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연되면서 나주의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일부에서는 지방균형 발전에 별 관심이 없는 이번 정부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늦어지면서 혁신도시 건설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혁신도시건설촉진 국회의원 모임'이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토해양부장관,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주요 이전기관장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갖는다.

국토해양부와 한국전력공사·한국농어촌공사 등 나주 혁신도시 이전 예정인 주요 공공기관이 민주당 최인기 의원 등 국회에 보고할 자료를 토대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현황을 점검한다.

◇8개기관 이전 미승인=참여정부에서는

모두 17개 공공기관의 나주 혁신도시 이전을 확정했다. 이중 한전·한전KPS·한전KDN·한국전파진흥원·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6개 공공기관이 지난 2007년 12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부터 지방이전을 승인받았다.

또 지난해 10월엔 전파연구소가, 지난해 12월엔 농업연수원과 한국전력거래소가 각각 이전 승인을 받는 등 모두 9개 기관이 균형발전위원회로부터 이전 승인을 받았으나 나머지 8개는 공공기관 선진화 작업 등과 맞물려 이전 승인이 되지 않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157개 이전 기관 중 절반도 안 되는 68개 기관만이 이전 승인을 받은 상태다. 이처럼 이전 승인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 승인된 기관의 이전 작업도 분사 부지매입 지연, 이전 업무조직 축소, 정부 및 공공

기관의 의지 미약 등으로 전반적으로 늘어난 양상이다.

◇지체 원인=대상 기관들은 이전 작업의 핵심인 부지 매입이 늦어지는 이유로 조성원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를 낮추기 전에는 부지 매입이 어렵다는 얘기다. 물론 조성원가가 높다는 것은 다른 기업들과 공장들의 유치도 어렵게 한다.

더욱이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공공기관의 경영수익구조도 나빠지고 기존 청사의 매각이 어려워지면서 이전 작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혁신도시 조성원가 경감이 시급하다고 보고 ▲원가 산정기준 조정 ▲유시터(U-city), 공동구 등 공공시설 계획을 적정 규모로 조정 ▲과도한 공원 및 녹지율 조정으로 유상 공급면적 확대 등의 대책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는 애초 그린 혁신도시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큰 문제점으로 대두하고 있다.

◇주요 기관 이전추진 상황=한전은 오는 4월 사옥 설계 공모에 착수하고 경영회전 상황 추이에 따라 올 하반기 부지매입에 착수, 2012년 이전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사옥 부지매입비 169억원, 설계비 50억원 등 모두 271억원의 올 이전 국비에 산을 확보했다.

하지만, 경영상황이란 단서조항이 걸리는 부분이다. 애초 상반기 매입 완료라는 계획이 늦어진 데 이어 하반기에도 어려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부지매입비 140억원, 설계비 33억원 등 197억원의 이전 관련 올 국비에 산을 확보했다. 하지만, 조성원가가 하향 조정 및 토지공급 조건 개선이 이뤄진 후야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조성원가 조정이 늦어지고 토지공사가 부지 매입 계약 후 토지를 우선 사용할 경우 잔여토지대금의 연 6%를 이자로 받는 것을 폐지해 달라는 농어촌공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부지 매입의 지연이 예상된다.

또 경기도 의왕시의 본사와 인재개발원 등 기존 부동산 매각 대금을 늘리기 위해 주거용지 등으로의 용도변경을 요구하고 있으나 관련 부처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이전 작업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오는 2012년 사업 완료 예정인 나주시 금천·산포면 일원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조성 부지. 7천315㎡ 규모의 부지에는 한전, 한국전력거래소 등 모두 17개 기관이 입주할 예정이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저소득층 지원 중산층 확대 인적 자원 육성 재도약 기반

국정운영 '녹색뉴딜-휴먼뉴딜' 양대축 확정

이명박 정부의 향후 국정 운영 기조가 '녹색뉴딜'과 '휴먼뉴딜'이라는 양대 축으로 확정됐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23일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열어 '중산층 키우기 휴먼뉴딜' 정책의 골간을 공개하고, 이를 '녹색뉴딜'과 같은 비중의 국정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휴먼뉴딜이란 유형적 자산인 물적 성장 동력의 확충에 초점을 맞춰진 '녹색뉴딜'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무형 자산인 인적 자원의 개발을 통해 사회 통합을 도모하고 미래의 위기에 대비하려는 국가 전략이다.

3대 핵심 정책 방향은 중산층 탈락 방지 및 진입 촉진, 미래중산층 육성으로 정해졌다. 단기적으로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위기 이후 재도약할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미래기획위원회는 "하드 분야의 녹색 뉴딜과 소프트 분야의 휴먼뉴딜을 국정 운영의 양대 축으로 삼아 국정의 균형을 도모하고 사회 안정 속에 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하는 국정 운영 의지를 국민에게 약속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중요한 시점에 중요한 제안을 했다"며 휴먼뉴딜에 힘을 실었고, 광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휴먼뉴딜은 바로 중산층 키우기에 대한 비전을 갖고 활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최근 야심 차게 내놓은 녹색뉴딜 정책이 야권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소의 계층에 대한 배려가 빠진 성장 일반도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은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가 지속돼 중산층에서 탈락하는 위기 계층이 늘어날 경우 사회 통합과 발전이 크게 저해될 것인 우려가 깔린 결정으로 받아들여진다.

정부 관계자는 "녹색뉴딜이 너무 경제 정책 쪽에 치우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보이지 않는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광승준 위원장은 '휴먼뉴딜 정책'과 관련, "사교육 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개혁정책을 먼저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회의 이후 가진 브리핑에서 "사교육비는 중산층 가

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모든 국민이 줄이기를 바라는 비용"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등이 사교육 없이 진학할 수 있는 '입시제도 선진화 방안'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이르면 다음달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와대 관계자는 "사교육 시장에서 (정부 대책에 대해) 반발이 있을 수도 있지만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획기적 교육 및 보육 정책을 예고했다.

참여정부 등 역대 정부가 추진한 교육·복지 정책과의 차별성에 언급, 곽 위원장은 "과거에는 대부분 빈곤층과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형태였으나 이번 대책은 가계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관계부처 합동회의에 이어 브리핑에도 참석한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제이슨 보도프 국장은 "오늘 회의의 초점은 부의 분배를 공평하게 만들자는 것이었다"고 소개한 뒤 "미국과 한국의 정책방향이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어 놀랐다"며 "경제위기 극복도 중요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대법 공직자윤리위 신영철대법관 처리 내달 8일 첫 회의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4월 8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신영철 대법관 충돌재판 개입 의혹'을 논의하기 위한 첫 회의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윤리위는 이날 위원장인 최송화 서울대 명예교수와 부위원장인 이진성 법원행정처 차장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산등록 심사'를 위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은 지난 19일 윤리위에 회부된 '신영철 대법관 사건'에 대한 회의 일정 등을 조율한 결과, 4월8일 첫 회의를 열고 그전까지 대법관으로부터 독일 등 해외 사법부의 재판 개입 사례 관련 자료도 넘겨받기로 했다. 윤리위는 향후 수차례 회의를 거친 뒤 신 대법관을 징계위에 부칠 것인지 등에 대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지난 16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신 대법관이 충돌재판에 개입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윤리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달 27일로 예정된 공직자 재산공개를 위해 이번 주 안에 고위 법관 등 대상자의 재산을 관보를 통해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연합뉴스

